



대구북부지청, 재해다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현장근로자 밀착교육」 실시

대구지방노동청(청장 정철균) 및 대구북부지청(지청장 김정호)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현장근로자 밀착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대구지역에서 금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관내 재해다발 8대 위험업종 중 전년도에 2건 이상 재해가 발생한 30인 미만 사업장 149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취지 설명 및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주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까지 총 100회에 걸쳐 전담 안전교육 지원팀으로 하여금 작업현장별(공정별) 밀착 교육을 실시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 약 100여명의 재해자를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시행한다.

서울관악지청,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지청장 이상진)에서는 건설현장의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2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점검한 20개 건설현장 모두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악지청은 작업중지 8개소, 사용중지 2개소, 시정지시 79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점검에서 적발된 유형을 보면 추락방지망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등의 추락재해예방조치 미

실시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안전조치 미실시, 감전재해예방조치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사고 대응, 민관합동훈련 실시

노동부는 화학공장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 및 폭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화학설비가 밀집한 울산과 여수, 안산, 천안의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실시되는 훈련은 도상훈련으로만 시행되었던 지난해 훈련과 달리,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주관이 되어 관내 민간기업과 합동으로 실제 행동으로 실시하는 현장 훈련 위주로 실시하였는데, 1일차에는 가상상황 메시지에 의한 도상훈련이 실시되었고, 2일차에는 대형 화학사고 발생을 가상하여 종합위험관리체계(IRMS)의 피해범위 예측 모델 운영 및 화학공장 자체 비상대응훈련 등 현장 훈련을 실시하였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아직도 미흡

노동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0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7.5%인 990개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법위반 현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81건,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107건, 과태료 부과 24건, 시정지시 3,952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시정지시 3,952건의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추락·낙하예방조치 위반이 1,895건으로 전체의 48.0%를 차지하였고, 감전재해예방조치 위반이 682건(17.3%),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이 273건(6.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를 집



중 점검한 결과 122개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사실을 적발, 이중 24개소에 대하여 7,3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지청장 김정호)에서도 관내 20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터파기 작업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현장 등 2개소에 대해 부분작업중지 조치를 하였고, 방호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위험 기계기구 3대에 대해 사용중지 및 개선후 사용조치를 내렸다. 또한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 낙하·비래 위험에 소홀히 대처하고 있는 84개 장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는 대부분 추락·낙하, 감전 및 붕괴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지난 5일 발생한 전남 고흥군 소록도 교량상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안전패트를 및 장마철 점검 등 각종 점검시 거꾸집 동바리 붕괴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지청,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특별점검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지청장 유병한)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40개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기준 목표지청 관내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재해자 1,137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74%를 점유하고 있고, 2005년 대비 20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재해 증가 추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안전·보건 취약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해 실시

하였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재해발생 사업장과, 신규설립 사업장이 해당되며, 추락, 낙하·비래, 협착, 전도, 붕괴 등 5대 재래형 사고요인과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서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먼저 자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유도한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할 방침이다.

안양지청, 사망 등 중대재해예방대책 마련 중점 추진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은 사망 등 중대재해를 근절시키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골조공사 및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중점점검, 홍보 및 교육 등 예방활동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20대 다발작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재해 발생 등 비상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업장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특히, 수시로 위험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사가 함께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하여 대비토록 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 안전 관리활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한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의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 등 중대재해는 노·사가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자율적인 재해예방 유도 및 홍보·교육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하거나 고의적·반복적인 위반 사업장, 사고유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용중지·작업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적인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청, 『관내 밀집 동종 건설현장 협의체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보간)은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관내 밀집·동종 건설현장 협의체』를 적극 활용한다.

협의체는 지난해 관내 대규모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포 상암지구, 은평 뉴타운지구, 인천공항철도(경의선 포함) 소속 건설현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매분기 정기적으로 협의체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근 현장간 재해예방 정보 공유 및 유대강화, 장마철·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재해예방기법 공유, 재해예방캠페인 및 안전관리 홍보활동 전개 등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이들 협의체의 그간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4.13(금) 서울서부지청 소회의실(3층)에서 『관내 밀집·동종 건설현장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협조방안 논의와 4월 중 개최예정인 「대기업-중소기업 건설현장간 안전시설 체험프로그램」 대상 사업장 선정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토의가 이루어졌다.

안양지청, 관내 직업병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단속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은 4월부터 직업병 유발 가능성이 큰 노말핵산, DMF(디메틸포름아미드),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및 '06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분진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총 116개소에 대하여 직업병 예방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세척, 인쇄, 용접 등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작업에서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건강진단 실시,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고 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개선 계획 수립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소음이 노출기준(90dB)을 초과하여 소음성난청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귀마개 지급·착용 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직업병 요관찰자의 사후관리조치 적정성, 작업환경개선 여부,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도 점검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보건관리자도 없고 재정적으로 개선 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업체가 70%인 점을 감안하여 시설자금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주에 대해 직업병 예방 기법 등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서부지청, 안전결의대회 및 등반기원제 개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보간)은 서울서부지역(마포·용산·서대문·은평)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과 범 무재해운동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결의대회 및 등반 기원제』행사를 개최하였다.

서울서부지청 관내 지역여건상 전체 사업장(38,918개소) 대비 대다수(98.1%)의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38,165개소)이고, 전체근로자(298,661명)의 53.1%인 158,45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발생된 재해건수도 2006년 10월말 현재 전체재해건수(1,316건)의 65.7%(865건)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동기(848건) 대비 17건(2.1%)이 증가하는 등 전체 재해율 상승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고, 마포구에서는 2010년까지 상암 새천년 신도시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첨단 서울형 신산업 지구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및 IT산업, M&E 산업특화단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허브 도시로 조성할 예정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7년도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재해감소를 위한 원년의 해로 만들고 재해율도 낮은 서울서부지역 구현을 위하여 『결의대회 및 등반 기원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 및 등반기원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명산인 북한산에서 개최되었으며, 관내 주요 사업장 및 협력업체 노·사대표, 50인 미만(건설공사 20억 미만) 사업장 노·사대표,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 및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관계자 등 총 70명이 참석하였다.

북한산 입구 정진사 공터에 집결하여 무재해 결의대회 및 선포식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족두리봉, 향로봉, 비봉을 지나 사모바위 앞에서 등반기원제 행사로 끝이 났다.

이보간 서울서부지청장은 이번 『결의대회 및 등반기원제』를 통해 노사정미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안전의식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전파함으로써 서울서부지역 범 무재해운동 분위기를 확산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해율 감소에도 상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북부지청,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연중 특별 관리를 통한 점검 및 지원강화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지청장 김정호)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자 금년 3월 기준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와 필요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을 통하여 노사자율 협력적인 재해예방 분위기를 조성한다.

지난해 대구북부지청 관내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7.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재해자수는 82.4%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재해가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전체 재해율 감소를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색한 투자와 비정규직, 고령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증가가 맞물려 재해발생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하지 않으면 재해감소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재해예방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10월까지 8개월 동안 재해발생 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토록 하고, 재해예방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하는 등 엄정 조치를 하는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기술 및 자금 지원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는 등 지도감독 및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취약제조업종 280개 사업장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각종 지도·점검시 요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정보를 지청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이메일을 통한 신속한 전달로 노·사의 자율·협력적인 재해예방 분위기 확산해 나간다. 